

위기의 제주감귤, 돌파구는 없는가



- 일 시 : 2003. 4. 9(목) 16:00~19:00
- 장 소 : 제주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소회의장
- 사 회 : 강경선 / 제주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 제1발표 : 고성보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고품질·적정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감귤유통·제도 개혁 방안”
- 제2발표 : 유명봉 / 제주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일본의 감귤 공동출하·공동정산제도와 제주감귤유통개선 방안”
- 토 론 : 오홍식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
김경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과일팀장
송방언 / 안덕면 화순리 독농가
강덕주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감귤팀장
장성철 / 녹색제주연구소장



강경선

여러모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제주 감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들 모이셨습니다. 고성보, 유영봉 두 분 발표자의 발제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홍식 조합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홍식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귤조합을 맡아서 일을 해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담아 일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실제 경험결과 공동정산제는 생각보다 오히려 쉬웠습니다. 그러나 품질개선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감협에서 조합원 5000 농가의 감귤 20,000개를 대상으로 당산분석을 했습니다. 분석결과 당도 10brix 이상, 산도 1도 이하의 감귤은 전체 분석대상의 1%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협의 공동브랜드인 블로초와 굴림원을 선별하는데 무척 어려웠습니다. 즉, 이는 감귤의 품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른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동정산은 15일 간격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단, '블로초'와 '굴림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블로초'와 '굴림원'인 경우 엄격한 품질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이들은 동등한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정산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즉, 공동정산은 동등한 고품질의 제품에 한해서 가능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건은 품질개선인데 감협

에서는 품질개선을 위해 1차적으로 품종개선에 노력중입니다. "감귤재배에서 품종을 능가하는 기술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한다면 품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 정도입니다. 따라서 품종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노력해봐도 월등한 품질개선은 어렵습니다.

이에 감협에서는 5년전부터 신품종 육성에 노력하여 지금 현재 신품종 60만본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 보급한 신품종은 한라봉 계통의 M16A이며 내년에는 신품종 블로초와 굴림원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들 품종에 대해서 묘목만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감귤농가의 타격이 워낙 커서 고접본까지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감귤품질 개선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내년 보급 예정인 품종인 경우 품종에 따라 최소 1brix, 최대 3brix까지 당도 상승이 가능하며 또한 신품종 보급으로 약 1500ha 정도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품질개선 방법에는 시비방법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감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9·10월의 감귤나무 잎이 노르스름해질 정도가 되지 않으면 감귤의 맛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인 경우 9, 10월 감귤나무 잎은 진녹색을 띵니다. 이는 영양학적으로 말하면 필요한 영양분의 200~300%를 초과하여 흡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미 고혈압, 당뇨, 성인병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볼 때도 현재 제주감귤의 시비체계는 고품질 감귤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개선된 시비방법은 향후 3~4년간 비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실험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제주감귤농협 모수원의 감귤나무를 대상으로 2년동안 시행해 봤는데 그 결과, 11월에 평균 당도12brix, 산1도 이하의 품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 사용된 품종은 현재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주제에 다소 빗나간 말이지는 하지만 감귤 홍보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타지역의 백화점등과 같은 대형 매장에 가서 홍보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제주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미지등과 같은 큰 규모의 관광단지에서 직접 관광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시식을 시키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품종개선을 통해 1~3brix의 당도를 높였으며 시비법을 통해 1~2brix의 당도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통방법을 통해서도 당도를 상대적으로 높힐 수 있습니다. 현재 감귤농협 대형유통센터에서는 기존의 출하되기 전 물로 세척하고 열로 말리던 방법 대신 솔로 닦아낸 후 dust collector(먼지 흡입기)로 잔류 농약, 먼지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품종과 같은 시비법을 쓴 감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처리된 감귤이 관당 300~400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는 1brix의 당도를 더 높힌것과 같은 효과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물로 세척하고 열로 말림으로써 손실되었던 당도를 솔로 닦고 dust collector(먼지 흡입기)로 제거함으로써 보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향후 감귤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개선이 관건입니다. 품질개선의 방법에

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품종개량입니다. 이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중장기적인 방법으로 품종개량을 통해서 약 1~3brix의 당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시비법 개선과 선과기 교체를 통한 당도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약 1~2brix의 당도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개선이 되면 지금 현재의 감귤에서 평균 3~4brix의 당도를 높힐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제주 감귤은 수입오렌지와 타과일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강경선

감귤정책에는 품질정책과 수량정책이 있는데 오조합장님은 품질정책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조합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품질향상에는 최소 6~7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단기적인 땀질식으로만 대응해왔는데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10brix 이상의 노지감귤이 전체 생산량의 1%내외 수준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오흥식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강경선



일본인 경우에는 모든 제품을 적정수준으로 품질 향상시킨 후 브랜드화 차별화 시켰는데 반해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브랜드화를 시킨 후



품질향상을 모색하는 듯합니다. 이는 1%의 고품질 상품을 위해 99%를 비상품으로 전략 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우리나라 농산물의 품질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인 경우에는 품질혁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감협에서 품질혁명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니 감사하고, 더 나아가 품질의 평균화에 더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역설적이긴 하지만 1%를 위해 99%가 희생되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 토론해 주십시오.

김경필



일단은 1%의 고품질 감귤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 늘려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감귤을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품질을 고품질화 시킨 후 공동계산·공동선별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수행조직을 확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고품질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품질개선과 관련하여 등급간 가격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의 경우도 과일 전체적으로 등급간 가격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상품가격에 비해 중품가격이 작년에는 70~80%범위였는데 작년에는 40~50%범위였으니까요.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의 기호가 점차 다양화되고 고급화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적정생산량과 품질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성보 박사님께서 발표해주신 내용중에 연도별 품질과 조수입을 비교한 표를 보면 97년 경우에는 약 69만톤 생산, 조수입 약 4천억원인 반면 2002년 경우에는 75만톤 생산, 조수입은 3천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생산량이 약69만톤으로 비교적 많은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입 4천억원 수준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해 당산도 비율이 9.3으로 비교적 높았고, 2002년산은 7.1로 당산도 비율이 낮았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는 향후 품질개선을 시키지 못한다면 감귤의 가격하락은 계속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품질과 관련하여 저장품의 품질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작년인 경우 상품의 질도 좋지 않은데다가 강우기에 수확하면서 저장품의 품질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구정이 지난 2월 이후 감귤가격을 더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데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딸기인 경우 2월하순부터 4월중순까지 주출하되며, 수입오렌지인 경우 2월말부터 집중 수입되어집니다. 즉,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감귤을 저장함으로 해서 조수입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품질이 좋지 않을 때에는 저장물량을 줄여서 부피나 부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격하락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기준을 설정할 때 지금까지는 크기에 의해 선과기에서 선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도라든가 색택, 모양과 같은 것들이 선별기준에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명봉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선별·공동계산을 도입할 때 선과시에 전문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써 전문인력들이 기계가 못하는 부분을 선별해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선별등급도 객관화 시킴으로써 좀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품질과 관련해서 감귤자체의 품질 개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유통개선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형유통업체 등의 등장으로 유통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점차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도매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감귤포장단위 개선의 필요성을 많이 제기합니다. 현행 15kg에서 10kg, 혹은 7.5kg로 중간 단위 포장화를 시키고 5kg, 3kg 소포장단위는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장단위를 줄여서 출하를 한다면 부패과 발생을 줄일 수 있고 감귤이 파손되는 것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강경선

품질과 연관되어서 특히 10kg, 7.5kg, 5kg의 소포장은 소비자층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농가 송방언 선생님 말씀 들었습니다.

송방언



저는 1972년도부터 지금까지 감귤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파동이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작목반의 한

임원으로서 선과장에서 출하하는 상태를 봤을 때 내 자신이 창피스러울 지경입니다. 상품인 것은 전부 산지수집상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통출하 하는 것은 상인들이 사가지 않는 것들이며 그 또한 어떠한 통제기준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번과와 9번과는 가공용으로 수매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들은 무조건 산지폐기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준 당도를 정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감귤은 산지폐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 등 생산자 조직에서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농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농민들의 의식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품종개선 방법밖에 없으며, 단기적으로는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단지내에서는 품종·시비법 등의 모든 방법을 획일화시켜 품질의 획일화를 꾀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대형매장이 아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소비자들과 man-to-man 형식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제주감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공동출하·공동계산을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품종갱신이 전량 되었을 경우 분명 똑같은 품종이라 해도 지역별로 특성이 다를 것입니다. 신맛, 상큼한 맛, 당이 잘 나오는 것, 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지역 브랜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한 품질기준에 의해 지역브랜드를 만들 경우 감귤의 희망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강경선

송방언 독농가께서는 품질향상과 유통개선



을 미시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출단지와 같은 생산지를 조성하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것은 품질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화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를 법정도매 시장이 아닌 직거래형식으로 판매함으로써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덕주 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강덕주



우선 주제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 내지는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유통명령제 관련해서는 그 제안방식에는 유통조정위원회가

제안하는 방식과 생산자단체가 제안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즉, 현재 제도적으로는 유통조정위원회나 생산자단체 어느 쪽이 제안을 하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의견수렴절차의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의견수렴방법은 그 대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한 고성보 박사님께서 제주감귤협의회와 같은 경우 그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견이 수렴된다 하셨는데 이 같은 경우 순수하게 제주감귤협의회 대표 구성원의 2/3인지 아니면 전체 구성원의 2/3 인지는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해석을 명확하게 한 후 유통명령제를 발효시킨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문제는 농가들이 얼마나 이에 동참해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농가들이 유통명령제에 동의하는 것과 실제로 자신들이 그에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

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유통명령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통협약인 경우에 제시된 kg당 65원 정도의 보상은 유통명령제에서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미흡하다라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명령제를 실시하였을 때 명령의 범위 및 효과는 감귤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 전 부분에 걸쳐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우려되는 문제는 조합원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비조합원과 상인에 대해서는 그 통제방법이 무엇이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에 대한 통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유통명령제 시행 중 이를 위반하는 자가 발생시 그 해당자를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가가 농가를, 조합이 조합원을 고발해야 합니다.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비용문제입니다. 유통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이 비용을 자조금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자조금이 농가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농가가 이러한 법 집행에 얼마나 동참해 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유통조절을 시행하게 된다면 도 조례에 의한 자율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띄고 있는 방식(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예관한법률, 이하 농안법)을 시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수시장은 완전과잉상태입니다. 따라서 감귤농가인 경우도 완전경쟁체제에 돌입하여 경영을 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인식을 갖고 농사를 짓는 농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의 강제성을 띄고서라도 감귤농가들이 완전경쟁체제 테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은 자조금 부분입니다. 자조금은 특정 산업의 자주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발적, 혹은 의무적으로 징수해 공통적 과제에 사용하는 목적기금입니다. 현재 자조금 형성과 관련하여 결정된 방법은 계통출하금의 1%로 조합원과 조합이 50:50으로 부담을 하며 금년산 노지감귤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금 방식에서 끝나지 않고 모인 돈의 집행에 있습니다. 즉, 자조금의 용도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지만 지역단위조합별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자조금 집행에 관한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자금조성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공동출하에 관한 부분인데요. 공동출하제도에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공동출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 전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조합단위, 작목반단위에서도 생산주체별로, 생산농가별로 품질채배기술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야 공동출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수님께 여쭙보고 싶은 것이 일본의 경우, 공동출하 시스템에 투입되는 인력, 조직 등에 관한 통계가 정리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다면 도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유통처리입니다. 현재 노지감귤 약 15% 정도가 직거래되며 그 외에는 도매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이 도매시장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선과기 시스템의 현대화입니다. 물세척과 화염방식에서 솔세척, 진공흡입시스템 방식으로의 전환이 우선시 되어야 상품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생산량의 최소 50%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유통센터가 있어야 도매시장 혹은 직거래시장 등이 원하는 대로 물량을 조절하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선과기의 현대화와 유통센터의 대형화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강경선

강덕주 선생님께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농안법 체계로 가야 하지만 거기에도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문제점 해결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선과기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철

질문식으로 하겠습니다. 고성보 박사님께서 비상품 감귤에 대해 유통명령제에 의해 강제단속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고성보

그렇죠. 법이 만들어졌으면 잘 지켜야죠

장성철

유교수님과 고성보 박사님의 말씀 중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공동선과를 함에 있어서 고박사님께





선 비파괴선과기 도입이 요구된다고 하신 반면 유교수님께선 그건 아주 최종적인 단계이며 현단계에선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 듣고 싶습니다. 고박사님 논문에 보면 작목반, 농협간의 상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들의 상생의 전략이 되려면 작목반의 규모는 어떻게 되어 하는 건지요? 작목반이 대형화된다면 현재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작목반이 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현재 영농조합과 같은 것들이 생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막연히 상생의 전략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조직화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선과를 하려면 그런 작목반의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하고 그러한 작목반이 현재의 농·감협과 어떠한 유기적인 연계전략을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공동정산제를 해야 이윤이 보장이 되고 이윤이 보장되어야 물량장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공동출하제라는 제도 하나로 이윤보장이 되는지, 다시 말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그에 따른 대응, 그 속에서의 정부 역할 그리고 농가 개개인의 역할 등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이윤보장이 된다고 봐야 할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봉

공동정산제를 했을 때 이윤보장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는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이나 Sunkist의 경우에는 전량 물량 확보가 가능하나 우리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최상품은 상인을 통해 출하하고 중품이하가 계통출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그쪽에서 더 주니까 그리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선 최상품을 농협쪽에서 전량 물량 확보를 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좋은 조건에 협상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건에서의 공동출하, 공동계산은 농가의 이윤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먼저 시행하고 차츰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과 판매의 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생산과 판매의 분리가 아니고 유기적 연계전략입니다. 생산과 판매를 분리한다는 것은 농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가는 생산과 유통할당, 조합이나 단체는 판매를 담당한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출하시 유통명령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유통명령제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출하가 제대로만 된다면 충분히 스스로 조율하여 출하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통명령제 도입은 필요 없다 봅니다.

장성철

일본에서는 비상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영봉

일본인 경우 비상품과는 집하장에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선별해서 0점으로 나가는 거죠. 그냥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스로 만드는데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농가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냥 짜주기만 하는 거죠. 이는 시설운영차원에서 과거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가정(농가)이라던가 동네 초등학교에 무상 보급하는 겁니다. 일본인 경우는 이러한 방식으로 비상품과를 처리합니다. 즉, 일본의 경우는 생산된 감귤 전량을 집하장에 가져오면 선별해서 비상품과는 주스화하여 농가에 무료로 배급하고 상품과만 출하합니다. 그리고 비상품과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소득상승의 효과를 주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농가는 비상품과를 집하장에 가져오지 않고 상인들에게 팔기도 합니다. 우리와 반대인 경우죠. 우리는 최상품을 상인들에게 판매하는데 반해 일본은 최하품을 상인들에게 파는 겁니다.

시장상황은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농업 또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의 변화에 빠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자본회전이 라든가, 생산, 기술변화가 제일 늦은 게 농업인데 소비자들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조 합장님께서 시설투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비파괴선과기와 대형선과장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일본은 전 물량을 계통출하할 때 대형선과장과 가공공장을 지었습니다. 그 설비들은 최소 20년동안 운영되면서 그들의 감가상각까지 감안한 시설비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실정에서 비파괴선과기나 대형선과장 등을 도입했을 때 이에 따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반문해 봐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선호체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 혁신은 국가의 몫입니다. 시험재배를 단체가 해야한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주농업시험장이라든가 감귤 연구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득이 올라가면서 민간이나 단체로 옮겨져가는 겁니다. 즉 시험재배와 같은 일은 국가 주도하에 시험장·연구센터 등에서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성공한 품종에 대해서는 개인 혹은 단체에 보급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감협에서 신품종을 시험재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판매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생산자단체가 시험재배까지 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고성보



저는 작목반을 유통의 단위로 규정지을 것이냐 아니면 생산의 단위 또는 출하 조절 할당수준에서 규정지을 것이냐의 측면에서 검토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제 의견은 작목반은 어디까지나 생산의 단위로 규정 짓고 싶습니다. 또한 유통시스템 문제에서도 거점식 대형화 유통센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즉, 작목반은 생산의 주체로서 유통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생산된 물량은 거대 대형 유통센터로 집결된 후 이 곳에서 일괄적으로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정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교수님과



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유교수님께서서는 공동출하, 공동정산이 정착이 되면 유통명령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즉, 제 의견은 유통명령제를 통해 기준이하인 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기준이상인 것에 한해 공동출하, 공동정산을 해야한 다는 것입니다.

과실계약출하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하조절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작목반이 너무 활성화 되어 있어 물량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통명령제를 통해 물량확보를 한 후 출하조절을 하고, 그 후 공동계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감귤문제를 풀어나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강경선

좋은 발표, 질문, 토론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고품질 신품종 개발에 획기적인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무시비방식(비료를 주지 않는 방식)의 도입이 당장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주도 감귤농업은 시설, 경영자 모두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반이 되는 토

지 등도 노후화 되어 있구요. 이 세 가지 중 생산자는 인위적인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고 품종갱신, 지력개선 등은 지금부터 빨리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공동정산제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작목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작목반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들을 총괄하는 감귤출하연합회(가칭)에서 각각의 출하물량을 할당함으로 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공동정산을 해야 한다는 유교수님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의 작목반은 순수하게 생산의 단위로서만 존재하고 거점식 대형유통센터가 작목반이 생산한 물량을 모두 확보하여 이 곳에서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박사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조금 구성에 있어서는 여러 내부적인 문제는 예상되나 자조금 구성이 시급함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귤유통의 중심적인 체계는 농안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제주감귤을 살리기 위한 긴급 토론회에 함께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